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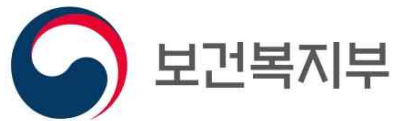
---

- 제6차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-

# 보건복지부 업무보고

---

2026. 3. 18.



# 목 차

I. 2025년 성과 및 평가 .....	1
II. 향후 추진방향 .....	2

# I. 2025년 성과 및 평가

## 1 성과

◆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(25.4월 국민연금법 개정) 성사, 하위법령 제정 등을 통해 '26년부터 차질 없이 이행 중

- (보험료율 조정) 월 소득의 9% → 13%
  - \*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'26~'33년까지 8년간 年 +0.5%p씩 단계적 조정
  - ⇒ 기금소진 시점 '56 → '71년으로 연장('24년 재정추계 기준, 수익률 5.5%)
- (소득대체율 상향) 41.5% → 43%\*로 인상('26~)
  - \* 평균소득('26년 A값 월 319만원)을 가진 사람이 '26년부터 40년 가입 시 소득의 43% 지급
- (크레딧 확대) 출산·돌봄 12개월·셋째부터 18개월씩 50개월까지 인정 → 첫째부터 12개월·상한 없이 인정('26~), 6개월 → 12개월('26~)
- (보험료 지원대상 확대) 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하였다가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 → 월 소득 80만원 미만 저소득층 확대('26~)
  - \* 기존 납부재개자 19.3만명 → 개선월 소득 80만원 미만 73.6만명
- (지급보장 명문화) 기존 안정적·지속적 연금급여 지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수립 의무 규정 → 개선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 명확화(법 3조의2)

## 2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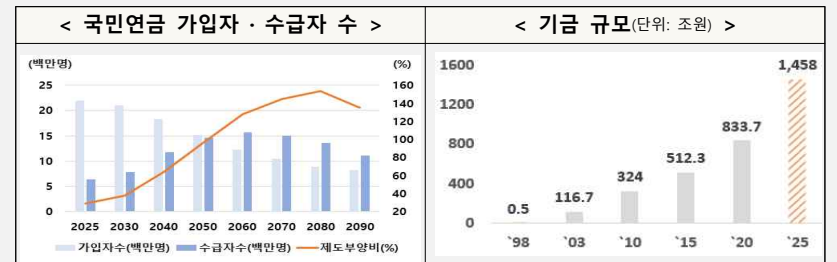
- 보험료율 조정을 통한 재정 안정성 강화, 지급보장 명문화로 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 일부 해소 및 제도 신뢰 제고
- \*소득대체율 상향 \*출산·군 복무 크레딧 확대 \*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 보장성도 강화
- ⇒ 앞으로는 국민연금 가입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충분한 가입기간 확보 및 적정 수준의 연금액 보장을 위한 구조개혁 추진 필요

# II. 향후 추진방향

- ◆ 국민·기초·퇴직·개인·주택연금 등 다층적 연금체계의 확고한 정립과 제도 간 적절한 역할 분담이 구조개혁의 핵심
- 국민연금은 기본적 소득보장 제도로서 보장성 및 재정 안정성 강화, 기초연금도 제도 취지 등 고려해 적정성 검토

## 1 국민연금

- ◆ (가입) 2,136만명(18~59세 인구 2,952만 명 중 72.4%)
- ◆ (수급) 790만명(일시금 포함), 노령연금 수급자 평균 연금액 68.5만원
- ◆ (기금) 1,458조원, 수익률 18.82% ('88~'25 누적 8.04%) ※ '25.12월 기준



- ① (청년 지원 강화) 현재 18~27세 미만 청년은 적용제외\*(미가입), 출산·군 복무 등으로 가입 공백 발생 → 충분한 가입기간 확보 어려움
  - \* 18~27세 미만청년 464만명 중 277만명이 적용 제외(59.7%) ※ '25.12월 기준

- (첫 보험료 도입)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청년에게 첫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 도입 추진('27~), 사전 안내·홍보 통해 가입률 제고
- 첫 보험료 도입 시 조기 가입 유도\* 및 장기 가입기반 조성 가능, 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신뢰 제고 효과 기대
- \* 現 평균 최초 가입연령 23.8세 vs 첫 보험료 신청 시 18세 가입

○ (크레딧 개선) 군 복무로 인한 소득 공백 보상,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가입 인정기간을 12개월 → 복무기간 전체\*로 확대('27~)

\* 육군·해병대 18개월, 해군 20개월, 공군·사회복무요원 21개월

- 여성 수급권 확대를 위해 출산 크레딧 수급자를 연금수급 시가 아닌 출산 시에 인정하도록 개선\* 추진('27 법 개정 목표)

\* (現 사후지원) 연금수급 시 가입기간 산입 및 연금액 지원 → (改) 출산 시 크레딧 수급자(부 또는 모) 인정하도록 개선(가입기간 산입 및 연금액 지원 시점은 현행 동일)

※ 크레딧 운영 국가 대부분(英, 스웨덴 등)은 출산 시 가입기간 산입과 함께 보험료도 지원

② (가입기간 확대) 경제적 어려움, 보험료 부담 등으로 가입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가입 사각지대 존재

◆ 납부예외\*·장기체납\*\*은 318만 명,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아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청년·무소득 배우자\*\*\* 등은 636만 명

\* 경제적 곤란으로 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자 \*\*납부예외 미신청+13개월 이상 미납

\*\*\* (적용제외) 18~27세 미만 청년, 무소득 배우자, 행방불명자 등

< 국민연금 가입 사각지대('25.12월) >

18~59세 총 인구 2,952만 명							
국민연금 가입 2,136 (임의계속 제외)							
사업장 가입	지역가입 641			임의 가입	지역연금 가입 ('23.12월)	적용제외	
	소득신고 368		납부예외				
	성실 납부	장기체납					
1,462	323	45	273	33	180	636	
					72.4%	6.1%	21.5%

○ (저소득층 지원)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 경제적 부담이 높은 지역가입자를 위해 보험료 지원사업 지속 추진('26.1~)

- 경제·산업구조 변화로 특고직(배달기사, 방문판매원 등) 증가 전망 →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(단기), 사업장 가입 전환 검토(중장기)

\* 특고직 103.1만 명, 소득을 신고한 69.5만 명 중 47.8만 명이 지역가입자('23.6월 기준)

○ (가입연령 조정) <sup>현행</sup>18세 ~ 60세 미만까지 가입 가능 → 고령자 경제활동 증가\* 등을 감안, 가입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 제기\*\*

\* [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(%)] : ('13) 31.2 → ('18) 32.2 → ('23) 38.3

\*\* (21대 국회 공론화) 60세 미만 → 64세 상향안에 시민대표단 80.4% 찬성

- ^노후소득 및 재정 영향 ^정년 연장 등 고령자 고용여건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, 가입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검토(중·장기)

\* (해외사례) 獨·英 67세 미만, 日 70세 미만, 스웨덴 없음

③ (어르신 보장성 강화) 수급자가 A값\*을 초과하는 소득 활동 시, 5개 초과소득 구간별 노령연금액의 5~25%를 감액하는 제도 개선

\* 최근 3년간('23~'25)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: 319만원

○ 월 소득이 '26년 A값319만원 이상 ~ 519만원 미만(1·2구간)인 국민연금 수급자는 감액 없이 연금수령 가능('25.12 법 개정 完 → '26.6.17 시행)

④ (지속가능성 확보) '25년 수익률 18.82%로 역대 최고 수익률 달성  
⇒ '25년 성과에 이어 수익률 제고 지속, 추가 재정안정 방안 모색 병행

○ (수익률 제고) ^투자 다변화 ^인프라 확충 ^책임투자 강화 등 추진

- (투자 다변화) 기준포트폴리오('25.1~) 적용으로 수익성·안정성 측면에서 우수한 자산에 대한 투자 지속

- (인프라 확충) 전문 운용인력 인센티브 강화(성과급 상향, 기준시장대비 상위 50% → 개선25%, '26.7월~) 등을 통해 기금운용 인프라 확충

- (책임투자 강화) 환경(E)·사회(S)·지배구조(G)를 고려하는 책임투자 대상을 대체투자(사모·인프라·부동산)까지 확대(現 주식·채권에만 적용)

○ (재정안정 조치)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국고지원 확대 등 추가 재정안정 조치 필요성 제기

- 다만, 재정 안정 방안은 국민부담 증가 가능성 및 노후소득 영향 등을 고려, 국회 연금특위 등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검토 필요

## 2 기초연금

### ① (현황) 노후소득 보장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도입<sup>(14)</sup>

- (수급자) 노인 中 소득하위 70% 지급, '25.11월 기준 707만명
- (선정기준액\*) '26년 단독가구 247만원\*\*, 부부가구 395.2만원
  - \*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% 수준이 되도록 하는 기준선
  - \*\* '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(247만원)이 기준중위소득(256만원)의 96.3%까지 근접
- (지급액) '26년 기준연금액 349,700원(감액 없이 최대로 수령 가능한 금액)
  -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각 20%를 감액\*
  - \* (예) 349,700원 + 349,700원 → 279,760원 + 279,760원
- (예산) '26년 27.4조원(국비 23.1조원+지방비 4.3조원)

### ② 최근 논의 동향

- 현행 노인 中 소득 하위 70%(목표수급률) 포함 시,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월 349,700원 정액 지급
  - 부자 노인도 가난한 노인과 동일한 기초연금을 받는 구조로, 정책 목적(노인빈곤 완화)을 저해한다는 문제 지적 ⇨ 지급 적정성 검토 필요
- 공동생활비 개념 등을 고려하여 부부 감액을 적용 중이나,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부부라는 이유로 일률적 감액은 불합리하다는 지적

### ③ 추진 방향

- 노인빈곤 완화 등 정책 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급구조 적정성, 불합리한 감액제도 개선 등 추진 ⇨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강화

◆ 국민·기초연금 개편은 다층 연금체계 틀 속에서 他 연금제도와 의 관계를 고려해 종합적 논의 필요

⇨ 구조개혁,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한 국회 연금특위 논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 및 지원